

## 인터뷰

## “건설 공사비 적정 수준 확보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

- 발주처의 과도한 삭감 관행 지양해야, '새만금' 성공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터 -

중견 건설인 윤재호 삼부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7월 초 전북 지역의 건설업계 수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1986년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이래 다양한 사회 활동과 함께 지역 건설업 중흥을 위해 발로 뛰어온 윤재호 회장은 최우선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턴키 공사나 대안 입찰, 그리고 최저가 입찰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와 제약이 구조적으로 너무 많으며,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수익성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실적공사비제도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 단가를 활용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률이 반영된 실적 단가가 수집 자료로 쓰이는 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계단식 구조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적절한 건설 공사의 원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과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재호 신임 회장을 만나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윤재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임회장

“부족한 공사비는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전북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와 건설경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감회와 고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발주관서의 공사비 부당 삭감 방지입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짧은 시간에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본회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국내 건설공사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3%에 이르던 공사 이윤율이 2010년 1.6%, 2011년에 2.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발주관서가 예산 절감이란 미명 아래 공사의 품질, 현장 여건, 계약 목적·성질 및 지역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삭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결국 시공물의 품질 저하에 따른 부실 시공의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원도급·하도급·자재·장비 업체 등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대책이 시급하므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도회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최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각 상위 10개 건설업체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영남권이 4조 7,000억원인 데 비해 충청권이 6조 5,000억원이었고, 호남권은 4조 7,00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건설 외 겸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한 실정입니다. 전북 지역은 2011년에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발주되어 도내 업체가 50.4%인 1조 2,000억원, 외지 업체가 1조 1,800억원(49.6%)을 수주했습니다. 1사당 평균 수주 금액이 17억 5,000만원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지요. 게다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실적 등 각종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흔히들 전북 지역의 최대 프로젝트는 새만금 사업이며,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의 건설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새만금 사업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지만 총론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 건설업계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방조제는 1991년에 착공하여 2조 9,00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총 33.9km를 준공하였지만 우리 전북 일반 건설업체는 단 1원짜리 공사도 해보지 못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약 1조 9,4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총 100점 만점에 9점을 가산 평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PQ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총 2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업체들도 역사적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과 책임 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몇 번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여 지역 중소기업은 물량 부족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 예산을 늘려 공공 건설부문의 일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계속공사 완공을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침을 수정하여 신규 사업에도 균형적으로 적극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지역 현장에서 시공되는 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PQ 및 적격 심사 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에 미치는 ‘후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장비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 개선안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기획재정부는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호남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권역별 설명회가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낙찰 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 실적과 경력 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사 수행 능력의 변별력보다 저가 투찰 가격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최저가 방식으로서 중소 업계보다는 대형사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수익성 악화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부실 시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페이퍼 컴퍼니 대부분은 조달청 등급 외 업체에 있다고 생각되며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실한 중견·중소 업체(순위 450위~2,800위)입니다. 지난해 중소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최저가낙찰제도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도를 금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국내 건설산업 실정과 중소 건설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년 간 유예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절감이나 이는 부실 시

공, 과당 경쟁 및 덤핑 입찰로 인한 적자 발생과 규모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소 건설업계는 수주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기고 이는 곧 나아가 지역 경제의 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건국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실시와 폐지를 반복한 최저가낙찰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을 지향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매년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하고, 불우한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건설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